

BKL 2026 이슈 브리핑

핵심 체크 포인트



2026년,
‘구조적 전환’과 ‘신뢰 경제’를 향한 갈림길



Contents

*항목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 총론	3
II. 산업, 성장, 밸류업	6
III. 인사·노무	9
IV. 중대재해·산업안전	12
V. 공정거래·상생	15
VI. AI 등 전략산업 육성	19
VII. 개인정보	24
VIII. 국제 통상	28
IX. 조세 정책	35
X. 사법 분야(검/경/법원)	39
XI. 국회 및 입법	43

2026 년,

‘구조적 전환’과 ‘신뢰 경제’를 향한 갈림길

2026 년 병오년, 한국 경제는 ‘예측 불가능성의 일상화(Normalization of Unpredictability)’라는 역설적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성 자체가 아닙니다. 정책과 시장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따른 ‘신뢰 프리미엄의 소멸’입니다. 주택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고,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장기 투자보다 현금 확보에 치중하고, 가게는 미래 소득에 대한 확신을 잃은 채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2026 년 경영 환경을 규정하는 **경제 3 대 변수**와 **정치 3 대 변수**를 점검하고, 그 **핵심 해결책**으로서 ‘신뢰 경제(Trust Economy)’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전문가들이 역량을 기울여 분야별 전망과 주요 정책, 시사점들을 준비했습니다.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꼭 짚어보아야 할 포인트들을 밀도 있게 정리한 만큼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이슈 브리핑」 편집위원회

우병렬 외국변호사(New York)

권석천 고문

최석림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New York)

김형욱 고문

정경화 변호사

I. 총론

1. 2026 년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3 대 변수

1) 글로벌 '기술 표준 전쟁'과 수출 전략의 재설계

미·중 갈등은 이제 통상 마찰을 넘어 '기술 표준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은 단순히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 '어느 진영의 표준(protocol)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GDP의 40%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수출 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2) 환율-부동산-소비심리의 복합 위기

1,4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지만 수출 경쟁력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나쁜 고환율' 국면입니다. 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집값의 급등은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를 의미합니다. 환율 불안 → 수입 물가 상승 및 금리 하향 제한 → 주택가격과 거주비용 급등 → 가계대출 증가 →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 소비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환율 불안은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장 잠재력 회복에 최우선순위를 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3) 인공지능(AI)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AI와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반도체 기술의 세대교체가 18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가속화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은 차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3nm(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공정의 주도권이 결정되는 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의사결정 속도를 국내 기업 투자 및 정책 지원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기술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2026 년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3 대 변수

1) 이재명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국회의 시간'에서 '행정의 시간'으로

지난해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새해는 '행정의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책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정책을 얼마나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지, 중대재해 대응과 공정거래 확립에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지 주목됩니다. 나아가, 5극3특 등 지역균형과 정년연장 등 노동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도 관심입니다.

2) 6월 지방선거: '포퓰리즘 vs 구조개혁'의 변곡점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주목할 유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발전을 향한 개혁의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손쉬운 포퓰리즘이 아닌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에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11월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2.0 시나리오'의 현실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까지 '딜(거래)'의 예술'을 과시할 가시적 성과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대중국 수출 제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큼니다. 당장 4월에 이뤄질 트럼프의 방중은 한중일은 물론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대형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 정부가 선택적 양보와 전략적 거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관건: '신뢰 경제' 위기의 극복

1) 신뢰 경제 위기의 가시화

신뢰 붕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잦은 정책 변경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의 설비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현실에서 입증된 팩트입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불신 속에 청년층까지 이른바 안전 자산(부동산, 금, 달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이 42.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신뢰 붕괴의 진짜 비용은 현재의 투자 감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기회 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입니다.

2) 신뢰 경제 회복의 세 가지 선결 조건

- ① **예측 가능한 규제 체계 구축:** 현재 한국의 기업 환경은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 공존하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기존 산업은 중첩된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반면 AI와 바이오 같은 신산업은 규제 기준 자체가 부실하고 일관성이 부족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규제 완화는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② **공정성의 가시적 복원:** 규제 완화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수요-공급의 균형성 제고, 계층 간·세대 간 부담과 책임의 공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국민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습니다.
- ③ **구조 개혁의 과감한 실행:**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의 구조적 과제는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더 미룰 경우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인구 위기 대응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책당국이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2026~2027년은 한국 경제가 '저신뢰-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 한국 경제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관련 전문가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6990

E byongyol.woo@bkl.co.kr



권석천

고문

T 02.3404.7599

E sukchun.kwon@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정규상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T 02.3404.0280

E kyusang.chung@bkl.co.kr

II. 산업, 성장, 밸류업

2025년은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기업법무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국정과제를 연이어 발표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에 가결된 개정 상법의 시행을 전후해 실무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한편, 추가적인 입법 논의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5년에 통과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2026년의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 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

1) 1차 상법 개정 – 2025. 7. 3.

2025. 7. 3. 국회에서 이른바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②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2027. 1. 1. 부터 시행), ③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비율 확대(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되나 1년간 유예기간 부여), ④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3%률의 확대 적용(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은 주주들로부터의 소 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 운영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보다 체계적인 내부 통제와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3%률의 확대 적용은 경영권 행사 국면에서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2차 상법 개정 – 2025. 8. 25.

1차 상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5. 8. 25. 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차 상법 개정의 연장선상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① 집중투표제 의무화(공포 후 1년 경과 후, 최초 이사 선임 주총 소집 시부터 시행), ②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확대(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법에 도입되어 있던 집중투표제가 이번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축소되는 한편, 소수주주의 권한은 확대되게 됩니다. 기업과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적격 이사의 선임 가능성, 특정 주주 또는 외부 투자자 중심의 의사결정, 경영권 불안정성 확대 등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주주 구성 및 의결권 행사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고, 이사회 구성의 안정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확대 조항은 1차 상법 개정에서 도입된 3%룰의 확대 적용과 결합될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있는 사안으로, 기업으로서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26 년 주요 전망 및 고려사항

1) 3차 상법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2025년 연말까지 자사주 소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의 추진이 예고되었으나 해당 입법 논의는 2026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환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현 정부는 자사주를 기반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우회적 활용 방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자사주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사 행위규범에 대한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 이사들의 의사 결정시 중요 참고사항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상법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법무부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거래를 추진할 경우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이와 같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배경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이사의 책임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향후 주주들로부터 제기된 소송 등에 있어 이사들의 면책에 상당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중 배포될 계획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다양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과 경영진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운용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타 입법사항에 대한 대비 및 주주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합병·분할 시 공정가액 적용 및 공시 의무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공시 제도의 강화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기업 규제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부터는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운영, 주요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주 구성과 의결권 구조, 주요 거래 유형별 리스크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윤성조

변호사

T 02.3404.0196

E sungjo.yun@bkl.co.kr



오명석

변호사

T 02.3404.6587

E myoungseok.oh@bkl.co.kr



안현철

변호사

T 02.3404.6541

E hyunchul.an@bkl.co.kr



III. 인사·노무

2025년도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이하 “노란봉투법”)으로 이 법은 2026. 3. 10.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일터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2026년도에는 법시행과 함께 노사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1.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 관련 시행령 입법 및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마련

가.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 관련 시행령 입법

고용노동부는 2025. 11. 24. 노란봉투법 이후의 교섭절차 단일화 절차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의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운영하되,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원하청간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이하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사용자성 확대와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사용자성 확대

먼저 사용자성 확대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의 핵심 판단 징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이고, 하청의 사업이 원청의 사업에 편입된 정도 및 경제적 종속성 여부는 보완적 징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 지배력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임금의 경우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해석지침은 행정예고 기간(~2026. 1. 15.)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6. 3. 10. 시행될 예정인데,

해석지침에 대하여는 노사 양측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될 해석지침의 내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2026년 상반기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현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된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8다296229) 판결을 선고하여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차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를 운영할 지 주목됩니다.

2)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동쟁의의 범위

다음으로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동쟁의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영 과정상 권한행사를 말합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i)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실시되는 경우, (ii) 실제 실시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장 요구(예: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석지침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은 배치전환 등이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업의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 또는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해석지침은 단체교섭이 집단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해고자 복직, 특정인 승진 누락 등 개별 조합원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의 범위에 관하여도 향후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해석과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2. 실질적 지배력 사전 점검 및 분쟁 대비 전략 마련 필요

노란봉투법 통과 후 많은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이나 도급·용역·위수탁관계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존부에 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도급·용역·위수탁관계 등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등 시정신청 사건에서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그 결정은 최대 20일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및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하청노조는 전략적으로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먼저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전 임에도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 내지 쟁의조정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하청노조는 일단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곧바로 하청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데, 기업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까지 대응해야 하고, 이 때 불법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의 각종 분쟁절차 내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비한 각 단계별 대응방안, 나아가 쟁의행위 및 적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전문가



김상민

변호사

T 02.3404.7545

E sangmin.kim@bkl.co.kr



박화진

고문

T 02.3404.0648

E hwajin.park@bkl.co.kr



구교웅

변호사

T 02.3404.6547

E gyowoong.gu@bkl.co.kr



박은정

변호사

T 02.3404.0598

E eunjung.park@bkl.co.kr

IV. 중대재해·산업안전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2026년도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는 2025. 9. 15. 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토대로 ▲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 건설공사 도급 시 의무 강화 및 건설공사발주자 의무·책임 신설,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 ▲ 위험성평가 의무화/처벌규정 신설, ▲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1.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

2025. 9. 15.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발표한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 중 2026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상 조치	주요 내용
예방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강화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추진 • 작업중지권 행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명문화,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 추진
	불법하도급 방지 등 구조 개선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정례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 강화	• 입법을 통한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강화 추진
	위험성평가 의무화/제재규정 신설	• 위험성평가 미 실시 및 필수 절차(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의무화,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등) 누락 시 과태료 추진
감독	점검·감독 대상 확대	• 산업안전 근로감독 강화, 감독대상 사업장 확대 • 반복 재해 발생 시 계열사 등 감독 대상 확대
	유사 고위험 감독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시 유사 고위험 사업장 감독 점검 확대
처벌/제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수사 강도 강화	• 2025년 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확대 신설 (주요 청 및 지청 13과 → 2025. 12. 30. 총 34과로 확대) • 2025년 전국 시도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 (2025년 하반기까지 총 20개 중대재해수사팀, 100명 규모)
	경제적, 행정적 제재 강화	• 중대재해 기업에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 기관투자자 투자금 회수 등 경제적 제재 •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과태료 강화 추진 • 공공기관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구조 개선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 2028년까지 중앙, 지방자치단체 약 3000명 증원 (2025년도 1,000명 증원 완료, 2026년 1,000명 증원 예정)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추진 • 중대재해 발생 공시 시스템 구축 (2025. 10. 시행)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강화	•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화 추진 •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의무 범위 확대 (120억 원→50억 원) 추진

2. 사업 전반에 걸친 중대재해, 산업안전 예방 활동이 필수적

2025년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 대상·강도 확대, 증권거래소 즉시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2026년도에는 중대재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한층 본격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각종 제재조치를 고려한 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중지권이나 위험성평가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의무 강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입법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확충과 점검,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 대상 확대 의지, 유사 고위험 긴급감독 점검 확대 등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이 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감안하여, 감독 대응을 위한 상시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세부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에서는 원하청, 노사 양측,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별 특성을 잘 살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 규제의 일률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로서도 위와 같은 예방 활동을 인증해주고, 처벌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



이형석

변호사

T 02.3404.0145

E hyungsuk.lee@bkl.co.kr



송진욱

변호사

T 02.3404.0462

E jinwook.song@bkl.co.kr



김영민

공인노무사

T 02.3404.0693

E youngmin.kim@bkl.co.kr



V. 공정거래·상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시장 구조 개선을 핵심 기조로 제시하였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 민생 밀집 분야의 공정경쟁, 디지털·플랫폼 시장, 대기업집단 규율 전반에 걸친 집행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 입법·제도 개선, 민사적 피해구제 확대, 집단적 권리 행사 보장 등 집행 수단의 다각화가 두드러집니다.

1.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대금 지급 안정성과 거래 구조 점검 강화

1) 주요 정책

공정위는 하도급, 가맹, 유통 전반에서 '제때·제값' 지급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확대,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연지급·부당감액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인프라 분야 하도급 관행, 산업안전 비용 전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 개별 행위는 물론 구조적 규율에 대한 대응 체계 점검 필요

기존의 개별 위반행위 중심 집행에서 벗어나, 대금 산정 구조와 비용 분담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구조적 규율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에 따라 원가 연동, 비용 전가, 정산 시점 등 계약의 핵심 조건이 조사·분쟁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조사와 민사 분쟁이 병행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납품대금 산정 기준, 원가 반영 메커니즘, 비용 전가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특히 플랫폼·AI 관련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단계에서 공정성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탈취 및 갑을관계 규율: 적발·입증·구제 전 단계의 실질적 강화

1) 주요 정책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익명제보센터 강화, 전문 조사인력 증원을 통한 직권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 및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 등의 단체 구성권 및

협상력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 강화 경향에 대비해야

기술탈취 및 갑을관계 규율은 단순한 불공정행위 제재 차원을 넘어, 민사적 구제 실효성 제고와 집단적 대응 구조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를 계기로 한 직권조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대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체행동 관련 경쟁법 적용 범위도 재정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자료 제공·관리 체계, 비밀정보 접근 통제, 기록 관리 등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단체 교섭·집단행동 가능성을 고려한 거래 구조 및 분쟁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3. 담합·불공정거래: 민생 밀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행 강도 상승

1) 주요 정책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가격남용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가 강화됩니다. 필요시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도 검토되고 있으며,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2) 가격 결정과 정보교환 과정에 대한 정교한 근거 마련 시급

담합 규율이 단순한 합의 여부 판단을 넘어, 가격 형성 구조와 시장 지배력 행사 방식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과정, 정보 교환, 협회 활동, 알고리즘 기반 가격 설정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 및 정보 교환 과정에 대한 내부 기록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자동화된 가격 정책에 대한 경쟁법 리스크 점검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디지털·플랫폼 시장: 독점력 남용 규율과 소비자 보호의 병행 강화

1) 주요 정책

배달앱, 대리운전, OTT 등 플랫폼 시장에서 최혜대우요구(MFN), 끼워팔기, 인접시장 전이에 대한 감시가 강화됩니다. 동시에 AI위싱 및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기조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입점업체 대금 보호 및 계약 투명성 제고도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2) 경쟁 제한에 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적극적 대응 필요

플랫폼 규율도 경쟁 제한 행위 중심에서 소비자 보호와 결합된 통합 규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광고·표시, AI 활용, 이용자 유인 구조 전반이 공정거래 집행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AI 활용 표현, 광고 문구, 소비자 인터페이스 설계 전반을 점검하고, 입점업체와의 계약·정산 구조에서도 투명성 강화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5. 대기업집단 규율: 사익편취·내부거래에 대한 실질 규제 강화

1) 주요 정책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기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 제도 보완을 통한 중복상장 유인 축소, 의무지분율 상향 등 구조적 규율도 병행 추진됩니다.

2) 내부거래 구조의 '사익 편취' 요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보다 경제적 실질과 효과를 중시하는 집행 기조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및 지원 구조 전반이 '사익 편취' 관점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배구조 개편 및 M&A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심사 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구조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편이나 투자·지원 구조 설계 시 공정거래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6. 불공정 피해구제 시스템의 외연 확장: 민사·집단적 구제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집행 구조의 확장

1) 주요 정책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대폭 확장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역할을 행정제재에 국한하지 않고, 민사소송·집단적 권리 행사·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 메커니즘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민사소송 활성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 개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확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의 사인의 금지청구권 확대, B2B·B2C 영역을 포괄하는 분쟁조정 제도 강화,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한국소비자원도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의

법적근거 마련, 사업자의 위법사실 통보조치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정거래법 집행의 무게중심을 '위법성 판단'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소송과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사전관리가 절실

공정거래 규율이 행정제재 중심의 공적 집행에서 벗어나, 민사소송과 집단적 구제를 통한 사적 집행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구제가 독립적으로 논의되는 구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공정위 조사·제재와 병행하여 민사소송, 단체소송, 분쟁조정이 연쇄적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단체소송 제도 개선은 기업의 방어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증거·문서·의사결정 기록 관리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 내부 보고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사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됩니다.

관련 전문가



김홍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신사도

변호사

T 02.3404.6584

E sado.shin@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VI. AI 등 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AI를 내재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정부는 AI 부총리 체제 하에서 역대급 예산(9.9조)을 투자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AI 인프라(GPU)를 확보하고 정부의 인프라(GPU)를 빌려 쓰고, 특화 분야(Vertical)의 성과를 내며, 보안과 에너지 효율을 챙기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정책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AI 인프라'가 기업 경쟁력 좌우: AI 데이터센터 투자 또는 정부 자원 활용이 핵심

- 대기업: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 “수도권 불가능, 분산특구 유망”

현재 수도권은 전력 수요 포화 상태로, 한전이 5MW 이상 전력 수용 신청을 대부분 승인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10MW 이상의 전기를 쓰려면 건축 인허가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지를 매입하고도 착공조차 못하는 '매물 비용'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부상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게 됨에 따라 특구 내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전력 거래(PPA)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비기술적 항목(고용 인원 등)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AIDC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 특구로의 입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확보한 GPU 1만장과 국가 AI 컴퓨터센터 등 적극 활용

중소·중견기업은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보다는 정부의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GPU 자원을 할당받고,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가성비'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및 GPU 지원 사업 공고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범용 AI'에서 '특화 AI(Vertical AI)'로의 이동

정부는 이제 모든 것을 잘하는 AI보다 의료, 제조, 법률 등 특정 도메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AI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전망:** 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 사업과 별개로, 산업별 특화 AI(피지컬 AI, 바이오 AI 등)에 대한 R&D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 **대응방향:** 자사가 보유한 '양질의 도메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정부의 R&D 예산과 정책 펀드(8,100억 원 규모) 지원을 받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 **산업군별 핵심 대응 전략 예시**

산업군	대응 전략 예시
제조업	설비 데이터의 디지털화(Sensor to AI)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정부의 AX 선도 프로젝트 에 참여하여 공정 자동화 비용을 지원받음
금융업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 금융 비서 '나 ' 자동 여신 심사 '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정원의 AI 보안 가이드라인 을 준수한 인프라를 구축함
방산	국산 AI 반도체(NPU)를 탑재한 국방 솔루션 개발로 우대 정책을 적용받고, 해외 수출 시 ' K-방산 풀스택 ' 패키지 전략 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
디지털 플랫폼	단순 챗봇을 넘어 업무를 대행하는 ' 에이전틱 AI(Agentic AI) ' 기술 확보 필수 정부의 글로벌 진출 펀드(8,1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동남아-중동 시장 선점

3) '에너지와 보안'이 새로운 규제이자 기회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부족과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관련 정책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 **전망:**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액체 냉각 등) 및 보안 내재화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디지털 안전법' 제정 추진과 함께 AI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사이버 스파이더)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대응방향:** AI 솔루션 도입 시 단순히 기능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 신뢰성**'을 마케팅 포인트나 수주 요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2026 년의 핵심 AI 정책 현안과 대응 방향

2026년은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AI의 '단순 도입'에서 산업별 '실질적 성과 창출'과 '안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동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3개 정책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피지컬 AI 및 지역특화 AX 정책
- 최근 일어난 대형 해킹사고와 연계한 새로운 보안 거버넌스 정책
- 내년부터 AI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제도적 변화

1) 피지컬 AI에 대한 지원

• 핵심 정책

2026년부터 5년간 6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제조공장 특화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 주도 시장 창출: 휴머노이드, 차세대 반도체 등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 시 파급력이 큰 하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공공 부문이 선도할 예정입니다.

• 대응방향

'공급-수요' 컨소시엄 구성: 중기부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로봇 도입 기업(수요)과 솔루션 기업(공급)의 컨소시엄을 요구하므로, 자사 공정에 맞는 로봇 SI 파트너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선행: 피지컬 AI의 핵심은 '기계가 알아듣는 데이터'이므로, 센서 데이터와 로그를 정부의 데이터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최대 4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 수령 기회)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 현장 실증 인프라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제조·조선 분야 AX 솔루션 기업 유망
- 대경권(대구·경북): 지능형 로봇 및 피지컬 AI 부품 기업 유망
-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에너지 AI 및 농생명 AI 에이전트 서비스 유망

2) 강력한 보안 규제(징벌적 과징금 등) 도입

- '단순 실수'라도 보안 사고가 반복되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제재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특례 신설을 추진

- **침해사고 과징금 신설 (과기정통부):** 데이터 유출이 없더라도, 시스템 마비 등 침해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 개정
- **CEO 책임 명문화:**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

• **입체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독립:** 단순히 직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력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부여해야만 사고 발생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PbD(Privacy by Design) 인증 획득:** 제품 기획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PbD 인증제'가 도입되며, 2026년 이후 출시할 서비스는 설계 단계부터 이 인증 기준을 맞춰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위협 자동 대응 시스템(AI 보안):** 정부의 '사이버 스파이더' 프로젝트와 연동되는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이버 위협에 보안 담당자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보안 자체를 AI로 자동화하는 투자가 규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본격 시행에 따라 기존의 '자율규제 원칙'이 '규제 제도화'로 변경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한 AI'라는 새로운 시장 표준에 적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2026년 AI 기본법은 처벌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규제를 '비용'이 아닌, 글로벌 시장(특히 EU AI Act 등) 진출을 위한 '사전 예방 백신'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법적 변화**

3대 법적 변화	내용
'고영향 AI' 지정 및 책무 강화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 • 해당 분야: 의료, 금융(대출심사), 채용(HR), 에너지(전력망 관리) 등 • 핵심 요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

생성형 AI의 '투명성' 의무 (워터마크 등)	사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 사전 고지: AI를 활용한 서비스임을 약관이나 UI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함 • 표기 의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생성물에 육안이나 기계로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함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국내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예: 일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기준 충족시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할 필요

• 단계별 준비 방안 제안

단계	준비 방안
Phase 1 자가 진단 및 분류 (Inventory)	• 체크리스트 작성: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생성형 AI'를 포함하는지 법령 기준에 맞춰 분류 • 데이터 거버넌스 점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적절성을 선제적으로 검토
Phase 2 투명성 및 안전성 장치 마련 (Technical Setup)	• 워터마크 기술 도입: 생성형 AI 모델 출력단에 C2PA 표준 등 글로벌 규격에 맞는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 • 설명 가능한 AI(XAI): 특히 금융·의료 분야라면 AI의 판단 근거를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로그(Log) 기록 시스템을 구축
Phase 3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Internal Policy)	• AI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정부의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내 표준 운영 절차(SOP)를 수립 • 통합안내지원센터 활용: 2026년 1월부터 운영되는 정부의 'AI 통합안내지원센터'를 통해 자사 서비스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컨설팅 및 점검 수행

관련 전문가



허성욱

고문

T 02.3404.0558

E sungwook.hur@bkl.co.kr



강정희

변호사

T 02.3404.6480

E jeonghee.kang@bkl.co.kr



이강혜

변호사

T 02.3404.7454

E kanghye.lee@bkl.co.kr

VII. 개인정보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통신·유통·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분야 전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 12. 2.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엄정한 제재·배상 체계 구축,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 강화, 기업의 책임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 430 회 국회(임시회) 제 1 차 정부위원회(2025. 12. 17.)에서 총 14 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2026 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효적 제재 강화와 정보보호 투자 유도

1) 징벌적 과징금 특례 (최대 10%) 도입 및 집단적 피해구제 강화

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전체 매출액의 3% 상한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③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집단소송 대상 범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요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더 이상 관리 미흡에 대한 단순 행정제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 기업 가치, 경영 책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인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ISMS-P 인증 의무화 및 사후 관리의 대폭 강화

취약점 점검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를 중단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을 원칙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변화는 단순히 ISMS-P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증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점검·개선·이행 실태까지 규제 핵심 판단 요소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3) CEO 책임 명문화 및 CPO 지정 신고제 도입

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를 최종적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현황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CPO 지정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IT·보안 부서의 기술적 과제로 한정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 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려는 제도적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보호 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제도화

개인정보위는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한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전담 인력 운영, 보호 예산의 확보(예: IT 투자재원의 10%), 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과징금 필수 감경'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징벌적 과징금 특례와 결합될 경우,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인 투자 및 통제 체계 구축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단순 비용 항목이 아닌, 제재·소송·사업중단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경영 자산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의 전환과 AI 시대의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1)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유출 통지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요구하던 기존 사후 대응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 침해, 접근 통제 실패, 취약점 악용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 및 감독기관에 대한 선제적 통지를 요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는 '유출 가능성'의 판단 기준, 통지 시점, 통지 대상 및 통지 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전 실태점검 확대 및 기술 기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개인정보위는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직접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전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자체 제출자료에 의존하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시스템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유출사고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처분 감점 확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등)하고, 취약점 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묻겠다는 기초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활용 제도 정비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고 가명·익명처리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적법한 활용 방안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특례 제도와 사전 검토 제도의 활용은 AI·데이터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사전 심사와 안전장치 설계를 통해 '허용 가능한 활용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정책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마이데이터 및 국외이전 규제의 전략적 관리 강화

마이데이터 제도는 2026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를 넘어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수신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송 기록 관리, 보안 통제 등 전송 전·후 단계의 책임 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SCC, Standard Contract Clause) 및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내부규정(BCR, Binding Corporate Rules)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보다 활발한 국외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EU 상호 이전체계 구축(2025. 9.)에 이어, 미국·영국·일본 등 데이터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동등성 인정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대규모 국외이전에 대해서는 국외이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업 인수·합병 시 국외이전 사전심사제를 추진하는 등 국외이전을 단순 신고·동의 이슈를 넘어 거래·투자 리스크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외이전은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넘어, M&A·투자·글로벌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관련 전문가



강태욱

변호사

T 02.3404.0485

E taeuk.kang@bkl.co.kr



이강혜

변호사

T 02.3404.7454

E kanghye.lee@bkl.co.kr



이규원

변호사

T 02.3404.1968

E gyuwon.lee@bkl.co.kr

VIII. 국제 통상

1. 2026 년을 좌우할 3 대 변수

1) 미국발 관세체제의 지속 여부: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

트럼프 2기 임기 첫해 세계통상지도는 천지개벽했습니다. 펜타닐 관세, 철강,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 국가마다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동원하여 양자협상을 주도하면서 세계통상지도를 바꾸었습니다. 교역상대국들은 높아진 미국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에 거액의 투자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 EU 등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는 아시아 제조 국가들입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던 미국은 사라지고, 국가별 차등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자규범 중심의 자유무역은 폐기되고, 미국과의 양자협상 결과에 따른 관리무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무역정책을 넘어 외교·안보·산업정책의 결합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순항할 것인지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는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여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결정 내용은 2026년 통상환경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심, 2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행정부에게 최종심은 어떤 판정을 내릴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승소할 경우: 관세는 일시적 비용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로 내재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현지화 압박이 구조화될 것입니다.

행정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Plan B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IEEPA 아닌 232조·301조·122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EEPA와는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그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기업은 지불했던 관세 환급을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큼니다. 상호관세를 근거로 타결했던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타결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Plan B에 대해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가 관건입니다.

2) 2026년 4월 미·중 정상외교: 타협은 가능할까?

2026년 4월 중국 방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미·중 통상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고 있는 중국은 2025년 부산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휴전의 종료시점은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직전이기에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두수출, 희토류공급 연장,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한 딜(Deal)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기술굴기, 수출우회로 확보로 미국의 공세에 맞서 온 중국은 미국이 제기해 온 비시장경제, 불공정경쟁 등 구조적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중 간 딜이 성사되는 경우: 미국의 대중 관세를 자체가 획기적으로 낮아지기 보다는 추가 관세 인상과 보복을 자제하고, 공급망·자원·기술을 둘러싼 ‘교환’이 이루어지며, 관세와 수출통제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는 형태의 ‘스몰 딜’(Small Deal)이 될 전망입니다.

미·중 간 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불안한 휴전’이 지속되지만, 통상, 기술, 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미·중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심광물·부품·소재, 첨단기술 등 특정 국가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병목지점(chokepoints)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충돌이 장기화될수록 전장(battlefields)은 보조금,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동, 표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개방형 통상질서를 대체하는 패치워크형 통상질서

WTO 체제는 복원되지 않고 양자·지역·동맹·이슈별 연합이 혼재하는 패치워크형 통상질서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WTO에 회람한 문서에서 최혜국대우(MFN)원칙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국가·품목별로 다른 대우를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물화된 분쟁절차 개선 등 WTO 개혁 논의 역시 단기간 타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패치워크형 통상질서가 계속 강화된다면, 기업은 복수의 규칙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같은 제품을 수출하거나 투자하더라도 미국, EU, 중국, 제3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혀 다른 요건과 규칙(원산지, 투자심사, 데이터 이전, 환경 규제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통상규칙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2. 2026년 지역별 주요 통상정책

1) 북미: USMCA 검토

2026년 북미 통상정책의 분수령 중 하나는 USMCA의 검토와 연장 여부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6년 검토 조항에 따라 2026년 7월 USMCA를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USMCA 검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외 원산지, 공급망, 디지털 교역, 노동·환경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할 가능성이 큼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시장접근확보와 무역장벽해소 문제에서 산업기반 확보와 안보로 완전히 이동한 상황에서, 이번 USMCA 검토는 미국 내 투자 등 북미 공급망의 재배치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USMCA를 신뢰하여 북미지역에 구축한 공급망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MCA를 둘러싼 예측불가능성은 우리 기업의 투자·계약 구조 및 공급망 설계에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EU: Open Strategic Autonomy 실행

EU는 전통적으로 규범기반 다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으나, 최근에는 통상정책을 경쟁정책, 산업정책 및 안보정책과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U는 (1) FTA, 파트너십 등 전통적인 통상협정에 따라 공급망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2) 중국발 과잉공급, 제3국의 보조금 등을 이유로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구제나 보복조치를 활용하며, (3) CBAM 등 각종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EU는 기후변화, 환경, 노동,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여 왔고, 2026년 중요한 규제들이 본격 적용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끝내고 2026년부터 이행단계로 넘어갑니다.

2026년 7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의 가이드라인, EU 강제노동규제 가이드라인 등이 발간되면 EU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CSDDD 이행과 강제노동 결부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중국: 제조업 수출주도와 무기화의 양면전략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굴기로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항하며, 제조업 공급과잉의 무기화, 핵심광물의 무기화로 미국에 맞서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전략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침체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중국 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다양한 경제안보형 도구를 상시화하면서, 동시에 과잉공급과 무역마찰을 관리하며 글로벌 사우스와 교역 다변화를 통해 유리한 통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수출통제를 상시화하여 이중용도 규정, 품목 리스트, 허가 등을 정교화하고, 최종사용자 심사를

강화하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2) 품목별 수출관리를 통해 과잉공급과 무역마찰을 완화하고, (3) 미국, EU 등 서방의 압력에 대응하여 ASEAN, 글로벌사우스 등과의 연결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서방과의 마찰을 완화하면서도 비-서방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율적인 통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제안보형 산업정책의 확장: 관세보다 넓은 규제의 시대

통상질서는 관세 중심의 가격경쟁 구도를 넘어 수출통제, 투자심사, 보조금 및 조달조건, 데이터/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쟁점이 결합된 경제안보형 통상질서가 상시 작동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은 기업 경쟁력 제고, 국가안보, 공급망 복원력, 기술우위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 개입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AI 등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수출통제와 아웃바운드 투자 규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EU는 외국 보조금 등으로 인한 단일시장내 왜곡을 문제 삼아 인수합병과 공공조달 영역에서의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품목 수출통제의 정교화를 통해 협상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입니다.

3. 2026 년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

1) 대미 협력의 패키지화: 투자·조달·기술·안보의 연계

2026년의 대미 통상관계는 더 이상 관세나 시장접근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투자·조달·기술·안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협상되는 패키지화가 자리잡는 흐름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관세·규제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전략산업의 시장·조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1) 대미 투자(특히 핵심광물 가공·정제, 첨단 제조, 데이터, 에너지 인프라 등)를 제시하되 (2) 그 대가로 관세·비관세 부담의 예측가능성과 조달시장 접근(방산·공공 프로젝트 참여, 표준·인증 경로)을 함께 확보하는 패키지를 설계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역시 단독 의제에 그치지 않고 투자·조달·기술과 결합되어 그 상단을 차지하고 투자·조달·기술 패키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2) 대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 협력을 도모하되 취약성은 완화

통상의 뉴노멀 시대에 한국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하되 중국 관련 취약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회담에 참가할 예정인데, 양국 정상 간 교류와 이에 따른 실무간 협의에

따라 양국 간 통상과 교역의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통제나 통관, 인증 검역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대결로 인해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중요 분야에서 중국의 수출통제나 관리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 관리형 소통을 계속하면서도 희토류, 흑연 등 핵심광물 비축과 재자원화, 대체자원 조달, 기술 투자, 공급망 협력,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해외 투자와 국내기업 지원 등 리스크를 완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대일 분야별 협력: 병목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협력

한국은 일본과 경제안보를 위한 대화 채널을 유지, 확대하면서, 공급망,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등 의제별 협력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핵심광물의 공동조달 및 비축, 공동 자원개발 등 공급망 협력, 미·중 갈등 속 다자적 규칙에 대한 지지 공조 등 한일 양국에 모두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 차원의 협력이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면, CPTPP 체제의 핵심인 일본과의 사전조율, 일본의 공개 지지 표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CPTPP 가입 추진

한국은 개방 수준이 높은 FTA인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TPP 가입을 통해 양자간 FTA가 없는 일본, 멕시코 시장을 개방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한 역내 조달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PTPP 회원국들과 디지털 교역, 데이터 이전 등 신통상규범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2026년 내 CPTPP 가입 완료는 쉽지 않습니다. 농수산 등 이해관계인 의사 청취 및 국내 이해관계 조정, 일본을 비롯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적 사전협의 등 CPTPP 가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공산이 큼니다. 만약 2026년 내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국판 무역장벽보고서(NTE)

산업통상부는 최근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보조금, 원산지, 정부조달 등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수집하여 2026년 상반기에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를 발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취하고 있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우선 교섭 의제를 설정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점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애로를 사실관계, 증빙, 피해규모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제출하여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교역상대국과의 협의 및 개선 요구를 지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시사점 – 정부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통상의 뉴노멀 시대

2026년 국제통상 환경의 본질은 관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통상·산업·안보가 결합된 경제안보형 통상질서가 지역·이슈별로 조각난 패치워크 형태로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법부 판단이, 미·중 정상외교에서는 충돌의 완화 여부와 강도가, 북미에서는 USMCA 검토가 각각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WTO를 비롯한 다자 틀내에서의 원칙을 중시하되,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관계의 증진을 통해 실익을 도모하고, 양자 간 현안을 적절히 관리하는 세 개의 트랙(다자, 소다자, 양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혜국대우(MFN)와 비차별원칙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실제 통상질서가 WTO 바깥에서 형성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복수국 규범의 설계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를 중심으로 소다자 연합을 구축 및 강화하며, 미·중·일·EU 등과의 개별 현안은 패키지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관세·수출통제·투자심사·탄소규제 등 규제 충격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회복력 강화 비용을 평소 운영체제에 내재화해야 합니다. 계약구조(가격조정, 재협상, 대체조달), 원산지, 컴플라이언스 역량, 이중소싱과 비축, 대체소재 R&D 등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안보, 기술패권, 산업정책이 혼재하는 통상의 뉴노멀 시대에는 기업 단독 대응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대응·협상 프레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민관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 생산, 조달 참여 등 제공 가능한 카드를 정량화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얻을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국판 무역장벽보고서와 같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의 애로 등 사실관계 및 피해 확인 → 대안 검토 → 교역상대국과 협상 우선순위 전환 → 무역장벽보고서 반영 등 선순환과 환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



최병일

고문

T 02.3404.0130

E byungil.choi@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IX. 조세 정책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조세정책은 “확장 재정 기초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의 구조적 세제 개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법인세·교육세 인상,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 도입,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개편 등 기업과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쟁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 법인세·교육세 인상 – 세부담 확충의 핵심 축

1) 법인세율 인상

2026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일반 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상향(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 구조가 적용(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서도 20%)되어 동일 과세표준에서 더 높은 세율이 부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동산 임대 중심 법인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전	개정 후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22%
3천억원 초과	24%	25%

이와 동시에,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배당가산율이 2027. 1. 1. 부터 10%에서 11%로 인상되어 법인 단계 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 단계 세부담 불균형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배당정책과 자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육세율 인상

교육세법 개정으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되어, 대형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금융권에 대한 세입기반 확충 수단으로서 기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고수익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 부담을 통해 응능부담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 자본·투자 관련 쟁점 – 고배당 분리과세와 벤처·리츠 특례

1) 고배당 상장법인 분리과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2026. 1. 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되며, 자본시장·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개편으로 꼽힙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은 작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주권상장법인으로 정의되고, 해당 법인의 주주(거주자)가 받는 현금배당에 대해 14%~30%의 누진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 측면에서는 배당성향 상향과 안정적 배당정책을 유도하여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장기·고배당 투자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개선함으로써 배당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벤처투자·프로젝트 리츠 관련 세제 특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도 벤처 투자세액공제·양도차익 등 비과세·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VC·PE·코퍼레이트 벤처가 SPC 구조를 활용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종전 직접 투자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구조 설계의 유연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리츠 구조에서 초기 양도세 부담을 줄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리츠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금융·자본시장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3. 글로벌 최저한세·국제조세 및 납세환경 변화

1) 내국추가세 도입 – 저율 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체계에 대응하는 '내국추가세액' 제도가 도입되어 15% 미만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내국추가세액은 $[\text{최저한세율}(15\%) - \text{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times \text{초과이익}(\text{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text{실질기반제외소득}) + \text{당기추가세액가산액}$ 으로 산정됩니다.

한국 내 저율과세 구조를 활용하던 일부 다국적 기업에게는 추가 세부담이 불가피해지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익 이전의 유인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하에서 국내 과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법인세율(10~25%)을 고려할 때 저율과세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액감면 등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기업은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대규모 다국적 그룹은 구조조정·지분 관계·로열티·금융거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징수체계 개편 등 납세환경 변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단위가 '일(日)'에서 '월(月)' 단위로 전환되고, 독촉 비용을 가산세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체납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 등 세원 투명성 확보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형식적 요건 관리·문서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향 – “세제 환경을 읽는 자가 유리한 판을 만든다”

2026년 조세환경은 법인세·교육세 인상, 고배당 분리과세,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 도입,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개편 등이 동시에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세수 확보와 성장 지원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세법 개정을 통해 조율하려는 과정에서 조세제도는 더 복잡해졌고, 기업·투자자 입장에서는 '세부담 관리'와 '세제 인센티브 활용'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후 수익률 변화를 전제로 투자·배당·차입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배당 상장법인 분리과세,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은 단순 '절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배당정책·투자전략과 연동되는 인센티브이므로, 이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세제와 경영전략을 통합해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 도입에 대응하여 다국적 그룹은 지주·IP·금융 구조를 재점검하고, 이전가격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유효세율 관리 전략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실질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체계 변경 등 강화되는 조세 집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서의 실질 검증을 강화하고,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세금 납부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은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기인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세관청의 해석·집행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조세 및 재정정책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강화되는 조세 집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2026년 조세환경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취해야 할 핵심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임재현

고문

T 02.3404.7589

E jaehyeon.lim@bkl.co.kr



김명준

고문

T 02.3404.7577

E myungjun.kim@bkl.co.kr



이주윤

전문위원

T 02.3404.1083

E juyun.lee@bkl.co.kr



서승원

변호사

T 02.3404.0964

E seungwon.suh@bkl.co.kr



X. 사법 분야(검/경/법원)

검찰 개편

2026. 10.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입니다. 70여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기존 검찰에서 담당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한 개정법 및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며, 그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합니다. 한편,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그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근거 법률로 정부조직법은 이미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후속 입법으로 공소청 설치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법안도 이미 2025년 6월 발의되어 국회 심의중이며,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당정, 부처간 협의 후 2026년 10월 이전에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을 직무로 하되 범죄수사는 그 직무 범위가 아니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수사권 경합 문제 등 개편에 따른 보완장치 논의는 지속될 전망

검찰청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자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다원화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각 기관 간에 수사권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6. 10. 1. 까지 검찰청이 존속하고 수사 기능은 유지됩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 후 업무 인계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도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건 검토와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복잡 다기해짐에 따라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각 상황에 대응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개편

2026년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5. 11. 11.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래와 같이 '현장인력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통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1. 인력 효율화를 통한 초국가범죄 대응 및 경찰 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인력 효율화 및 정보업무 수행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찰관 기동대, 기동순찰대, 광역정보팀(폐지) 인력 전환배치와 신규인력 증원을 통해 약 3,800명을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및 초국가범죄 대응 인력 등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 및 시도경찰청 수사팀 인력을 약 1,300명 추가 배치하여 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및 외사정보 인력을 약 500명 증원하여 국제협력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 증원과 함께 경찰청 본청에 국제치안협력국, 국제공조2과 및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국가별 공조를 위해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4개 시도경찰청에 국제공조계를 신설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에 대한 범죄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경찰서 정보과를 복원하여 외국인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등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타 민생치안 인력을 약 600명 증원하여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관계성범죄피해자보호, 경찰서 112 상황실 인력 등을 보강할 예정이며, 과도하게 세분화된 계/팀을 통합운영하고, 관리자 직위를 축소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수사 완결성 제고 기대와 함께 역할 조정 논의도 이어질 듯

검찰 개혁과 함께 이루어진 수사 권한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시행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수사팀 및 민생치안 인력을 보강할 경우 경찰 인력의 업무부담을 균질화 하고, 현장 대응 및 수사완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계속하여 수사권 조정 관련 제도 및 역할 조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개편

상고심의 운영과 구성, 심급제, 법관의 독립과 충실한 직무수행, 민사소송에서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 다양한 법원 개혁 논의

1)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관평가위원회 추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면 현재 전원합의체 규모의 연합부를 2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률가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변호사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법원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찰이 법률 자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과 전략논의, 법적조언이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2.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

법원 개혁 사안은 헌법적, 법률적 쟁점이 다양하게 얹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지향하는 형태로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



조상철

변호사

T 02.3404.1984

E sangchul.cho@bkl.co.kr



권오석

변호사

T 02.3404.6580

E ohseok.kwon@bkl.co.kr



안무현

변호사

T 02.3404.0452

E muhyun.an@bkl.co.kr

XI. 국회 및 입법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인 2026년에도 국회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 속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불법 비상계엄의 뒤처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계엄 문제는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법안이나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6월에 시작되고,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발생할 보궐선거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환경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운영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국회의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이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국회는 6월 지방선거의 민심에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전기간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를 뒷받침하는 '정책 국회' 예상

이재명 정부 2년차이지만 아직 집권 초반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계속적으로 국회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여당내 균열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6월이면 22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지만, 현재의 국회 구성을 바꿀 만한 변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비상계엄 뒷수습으로 소모된 시간을 보충하려고 할 것입니다. 2025년 연말에 2026년도 부처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 실현을 독려한 것도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시국회가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2월부터 12월까지 쉼없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이외에는 선거 등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는 것도 국회 중심의 정책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2. 6.3 지방선거 민심은 후반기 국회 구성과 운영에 제한적인 영향

2026년 정치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입니다. 당분간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칠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민심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가 향후 국회 및 정당 등 중앙 정치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의 집행부는 교체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 5. 29. 까지이므로, 여당 주도의 국회 운영은 이어질 것입니다.

3.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

전반기 국회는 5. 29. 에 종료되므로 그 전에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김태년, 박지원,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다선 의원 중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의 관심 포인트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는가입니다. 전반기 국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다툼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4. 기업 대상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가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 증인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산업재해, 기술탈취 이슈 등 국민적 관심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당분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청문회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업무,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 대한 설명과 설득, 네트워크 형성, 우호적 여론 조성 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주요 예상 입법 및 정책 과제

2026년에는 6.3 지방선거 전과 후의 입법 및 정책 과제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주식시장 부양 관련한 자사주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안, 가상자산 관련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 상속세 개편 방안,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급확대 등 표심을 끌 수 있는 정책이나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관련 법안, 태양광,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논란이 많은 부동산세나 재산세 문제, 로비스트 등록 관련한 문제, 헌법 개정 문제,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제도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전망, 대응전략 – 6.3 지방선거의 영향은 제한적, 국회는 국회의 시간대로 간다

2026. 6. 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로서 민심의 향방을 살펴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 중앙 및 국회 구성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입법이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건이 증가함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국회의 압력은 증가할 가능성이 큼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며,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기업에 부여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 예산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BKL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최석림

변호사

T 02.3404.0654

E seokrim.choi@bkl.co.kr



김형욱

고문

T 02.3404.7350

E hyeongwoog.kim@bkl.co.kr



조용복

고문

T 02.3404.1080

E yongbok.cho@bkl.co.kr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